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누락 심각”

정동영 의원, “년간 1조원 규모 추정… 정부, 누락 원인 철저조사하고 방지대책 수립해야”

건설 현장노동자들의 고용복지 및 생활안정화 위해 운영되고 있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의 누락예이 연간 1조원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누락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도 기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된 퇴직공제부금은 5,114억원 규모로, 2016년 기준 건설노동자 월평균 실제 근로일수와 퇴직공제금 적립일수 차이를 환산하면 연간 1조원 정도의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공제부금이 누락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퇴직공제금 제도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 1월 5,000원씩(2018년 1.1일부터) 퇴직공제금을 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건설노동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근로일에 상응하는 만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고 일정요건(납부월수 12개월 이상)이 되면 건설노동자가 퇴직(사망 포함) 후나 60세 이상이 되면 공제부금의 납부월수에 따라 공제회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퇴직공제금제도는 대다수가 일용직인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여건 및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계절·경기에 따라 일자리가 들쭉날쭉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고용복지와 생활안정, 그리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1996년 법률 제정을 근거로 1997년부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설립되어 운영·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건설노동자들의 고용복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의 적립 및 운영관리가 매우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경청간담회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경청간담회에서 우원식(오른쪽 다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주영(오른쪽 네번째)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내·외국인 적립일수 현황을 보면, 외국인 노동자 퇴직공제금 적립일수가 훨씬 높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고용허가제 인원을 H-2 E-9 비자 포함해서 연간 57,000명 정도를 허가하는데,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16년 기준 18만명 수준으로, 노동부의 외국인 노동자 허가 인원의 3배에 이른다.

이는 20일 이상이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현 제도를 기준으로 할 때,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의 퇴

직공제금을 고의적으로 축소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간한 <2016년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사업연보>에 따르면, 건설노동자들의 년평균 퇴직공제금 적립일수는 2015년 78.8일(월평균 6.5일), 2016년 77.9일(월 평균 6.4일)로 줄어 들었다.

이러한 퇴직공제금 누락과 부실관리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박근혜 정부 하 2016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퇴직공제금은

건설노동자들에게는 퇴직금에 해당한다. 소득과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고용 요건이 매우 열악한 건설노동자의 고용복지 증추기관을 자처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 관리부실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하면서, “2011년에도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누락과 부실관리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상대로 누락 등 부실 관리 방지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 6년간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공제금 부실관리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추미애 “조만간 지대개혁 로드맵 마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조만간 당 차원의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논어와 목민심사에서 불균형(不均衡) 환불균(惠不均), 백성은 배고픔보다 불균형한 것에 더 분노한다고 했다”며 “땅 보다 땅이 보상받는 사회가 우리가 갈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일각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에는 “최저임금을 공격하는 것은 내년의 추가 인상을 막기 위한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혁안을 확정하고 야당과 협의를 시작하고자 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등의 지방선거 후 개혁 주장에 대해서는 “마치 30년 전 호헌세력과 개혁세력 간 대결이 재연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혁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 하지는 것은 문 대통령과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의 일치된 공통공약”이라고도 강조했다.

추 대표는 북한을 향해서는 “북한이 평화와 공존의 결단을 내린다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적극 화답할 것”이라며 “남북 간 대화의 북이 간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종재하고 추진할 의지가 있음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야당에는 “보수야당은 아무도 찾지 않는 냉전의 골방에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저의 남은 임기의 목표는 지방선거 승리와 정당 혁신 딱 두 가지”라며 “당권의 안정적 이양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집권여당의 전범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박지원 “유승민 ‘한반도기’ 발언은 국민-바른 통합 반대 커밍아웃”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16일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남북 선순환 공동입장서 한반도기 대신 태극기를 들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유 대표의 보수분쇄 발언은 ‘우리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반대한다’는 커밍아웃”이라고 규정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북이 공동입장을 하면서 남은 태극기를, 북은 인공기를 들고 입장하며 세계민방에 분단을 과시하지는 건가. 우리나라에서도 인공기가 팔려야는 게 보수의 태도냐”라고 일갈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국민의당 내부 갈등을 겨냥한 유 대표의 “정치적 해결” 발언과 관련해 “유 대표의 속내를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유 대표의 제안 역시 일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뉴시스

교육부 · 문체부 고위직, 고시 순혈주의 공고화

교육부 주요간부 100% 고시 출신 · 문체부 비고시 출신은 단 한명에 불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상징적으로 고시 순혈주의 타파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역설적으로 교육부, 문체부는 고시 순혈주의가 더욱 공고해지거나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이 교육부와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한 결과, 교육부는 개방형 직위를 제외한 본부 실국장 전원이 ‘고시출신’이었다. 문체부 역시 작년 4월 대비 고시출신이 한명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경우, 본부 주요 실국장급 17명 가운데 개방형으로 임용된 학교혁신지원실장(전문직, 장학관)과 교육과정정책관(전문직, 장학관)을 제외한 직업공무원 15

명은 전원 행정(사법)고시 출신이었다. 문체부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보도자료를 통해 실국장급 주요 보직 중 개방형 공무원 4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100% 고시출신으로 채워진 점을 지적하며 문체부의 순혈주의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후 문체부는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나 본부 주요 실국장급 19명 가운데 개방형 2명을 제외한 17명의 직업 공무원 중 비고시 출신은 단 한명에 불과했다.

그동안 문체부 정부는 비고시 출신 등용을 통해 조직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관료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온 바 있다.

실제 외교부 강경화 장관 법무부 박상기 장관 등을 임명하며 고시 중심의 인사 관행을 보이던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부처 내부에서는 여전히 고시출신이 주요 실국장 보직을 차지하고 있거나 임명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조직의 생명력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이라고 강조하고, “지급의 인사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과연 김상곤 교육부 총리와 도종환 문체부장관이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볼 것”을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중앙선관위 “지방의원선거구획정 서둘러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지방의원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국회에 처리를 촉구했다.

중앙선관위는 전날(15일) 열린 전체 위원회의에서 선거법 상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 확정 등 관련 규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모았다고 16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따르면 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시·도의원 지역선거구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표 확정안이 법정기한(선거일 전 6개월인 지난해 12월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되지 못한 상태).

중앙선관위는 이에 “다음달 3일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와 3월2일 지역구 시·도의원, 자치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을 앞둔 만큼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총정수표가 빨리 확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지난 제1회 지방선거에서는 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선거결과에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국립중앙도서관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